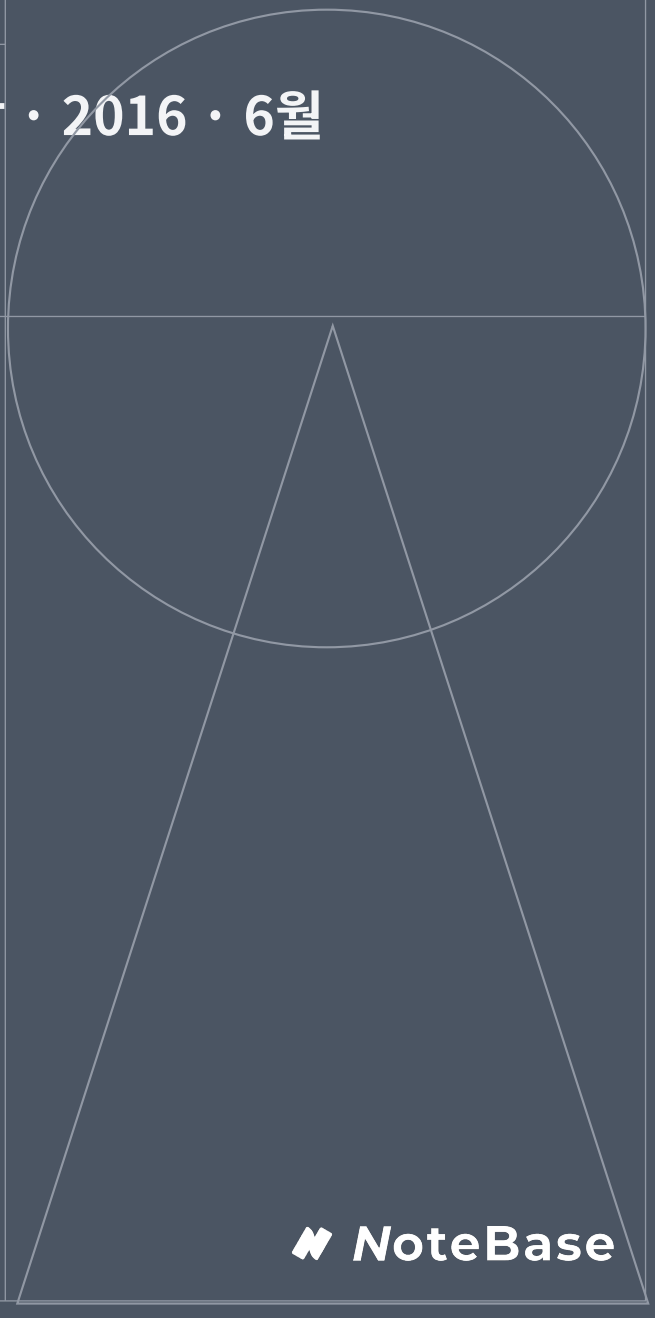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지적학 · 2016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지적학 · 2016 · 6월

공무원/서울시/7급 · 지적학 · 2016 · 6월

문 1. 다음 중 지적의 직접적인 기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등록의 법적 효력을 갖게 하고 공적 확인의 자료가 된다.

② 도시 및 국토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③ 토지 등 부동산 관련 산업을 진흥시킨다.

④ 토지의 매매나 교환을 위한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적의 직접적 기능과 간접적 기능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직접적 기능은 지적공부의 등록·공시·확인 작용에서 바로 생기는 기능이다. 토지의 권리관계 공시, 거래 안전, 계획 수립 자료 제공이 여기에 해당한다.
간접적 기능은 지적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된 결과 사회·경제적으로 파생되는 기능이다. 부동산 관련 산업의 진흥처럼 파급효과로 나타나는 기능이 여기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지적은 토지를 공적으로 등록하고 확인하는 제도이므로 토지등록의 공적 확인 자료가 된다. 등기와 결합하여 권리관계의 공시 기반이 되므로 직접적 기능에 해당한다.
2번 O: 지적은 필지별 위치, 경계, 면적, 지목 등의 정보를 제공하므로 도시계획과 국토계획의 기초자료가 된다. 토지 이용계획을 세우는 데 바로 활용되므로 직접적 기능이다.
3번 X: 틀린 부분은 '토지 등 부동산 관련 산업을 진흥시킨다'는 표현이다. 부동산 산업의 활성화는 지적제도의 운영 결과로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이므로 직접적 기능이 아니라 간접적 기능이다.
4번 O: 지적은 거래 대상 토지를 필지 단위로 특정하고 위치·경계·면적을 공시하므로 토지의 매매나 교환에서 매개 기능을 한다. 거래의 기초가 되는 공적 장부 역할이므로 직접적 기능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직접적 기능과 간접적 기능을 모두 긍정적 효과라는 이유로 한 덩어리로 보면 3번에 흔들린다. '산업 진흥'처럼 제도 운영의 파급효과를 묻는 표현은 간접적 기능일 가능성이 크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 내용이 지적공부의 등록·공시·확인·계획자료 제공처럼 지적제도에서 바로 수행되는 작용이면 직접적 기능이다. 그 결과 시장 활성화나 산업 발전처럼 한 단계 떨어진 효과를 말하면 간접적 기능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직접 기능은 등록·공시·확인·계획자료이고, 산업 진흥은 간접 기능이다.

NoteBase

문 2.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비교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제도가 실질적 심사주의를 택하는 반면, 등기제도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택한다.

② 지적제도는 토지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고, 등기제도는 매도자가 등기를 신청한다.

③ 지적제도와 같이 등기제도도 물적편성주의로 공부를 편철하고 있다.

④ 지적제도가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제도라면, 등기제도는 소유권 등 법적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공시 대상, 심사 방식, 공부 편성 방식, 신청 구조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적제도는 토지의 위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등 물리적 현황을 국가가 등록·공시하는 제도이다. 키워드는 물적 현황과 사실관계이다.
등기제도는 소유권, 저당권 등 부동산에 관한 법적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키워드는 권리관계와 법률효과이다.
두 제도 모두 토지를 기준으로 공부를 편성하는 물적편성주의를 취하지만, 지적은 현황 공시가 중심이고 등기는 권리 공시가 중심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지적제도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위치, 경계, 면적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실질적 심사 성격이 강하다. 등기제도는 신청서와 첨부서면의 형식적 적법성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므로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등기제도는 매도자가 등기를 신청한다"는 표현이다.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권리변동 등기는 매도자 단독신청이 아니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따라서 신청 주체를 지적은 토지소유자, 등기는 매도자라고 단순 대비한 이 선지가 가장 옳지 않다.

③ O
등기제도도 지적제도와 마찬가지로 사람별이 아니라 부동산별로 공부를 편성하는 물적편성주의를 취한다. 토지나 건물마다 독립된 등기기록을 두는 방식이므로 옳다.

④ O
지적제도는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 지목 등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고, 등기제도는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등 법적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두 제도의 기능 차이를 정확히 설명한 선지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신청 주체를 서로 대응시키는 방식이라 그럴듯해 보이지만, 등기는 매도자 혼자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공동신청이 원칙이라는 점을 묻는 함정이다. 신청인 비교보다 현황 공시와 권리 공시의 차이를 먼저 잡아야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적과 등기를 비교하는 문제는 먼저 지적은 물리적 현황 공시, 등기는 권리관계 공시라는 축을 잡으면 정리가 된다. 그다음 심사주의는 지적은 실질, 등기는 형식, 공부 편성은 둘 다 물적편성, 신청 방식은 등기의 공동신청 원칙을 따로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지적은 현황 공시, 등기는 권리 공시, 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NoteBase

문 3.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조사법에 의한 지목분류에서 과세지목으로만 묶인 것은?

① 전, 답, 대, 지소, 임야, 잡종지

② 전, 답, 대, 임야, 분묘지, 잡종지

③ 전, 답, 대, 지소, 염전, 잡종지

④ 전, 답, 대, 지소, 유지, 잡종지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조사령상 과세지목 6종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제1호의 전·답·대지·지소·임야·잡종지와 그 밖의 지목을 구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과세지목은 당시 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지목군을 뜻한다.

핵심 구분

당시 과세지목으로 묶이는 것은 전, 답, 대지, 지소, 임야, 잡종지의 6종이다. 분묘지처럼 별도 지목군에 속하는 것과, 염전·유지처럼 당시 독립 과세지목 6종에 들어가지 않는 지목을 섞으면 틀리게 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전, 답, 대, 지소, 임야, 잡종지는 토지조사령 제2조 제1호의 과세지목 6종에 해당한다. 여기서 대는 대지의 약칭으로 보면 된다.

② X: 분묘지가 틀렸다. 분묘지는 제1호의 과세지목 6종이 아니라 제2호의 별도 지목군에 속한다. 올바르게는 분묘지 대신 지소가 들어가야 하므로 전, 답, 대, 지소, 임야, 잡종지이다.

③ X: 염전이 틀렸다. 염전은 당시 토지조사령상 독립한 과세지목 6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염전 대신 임야가 들어가야 하므로 전, 답, 대, 지소, 임야, 잡종지이다.

④ X: 유지가 틀렸다. 유지는 현행 지목 체계에서 익숙한 용어이지만 당시 토지조사령의 과세지목 6종에는 없다. 올바르게는 유지 대신 임야가 들어가야 하므로 전, 답, 대, 지소, 임야, 잡종지이다.

오답 포인트

분묘지, 염전, 유지처럼 익숙한 다른 지목을 과세지목 6종에 끼워 넣는 함정이 핵심이다. 특히 현대 지목 체계를 당시 토지조사령 체계에 그대로 대입하면 오답이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 문제는 먼저 과세지목 6종을 고정해서 본다. 전·답·대지·지소·임야·잡종지가 아니면 우선 배제하고, 현대 지목이나 공공용 성격의 지목이 섞였는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토지조사령 과세지목은 전·답·대·지소·임·잡의 여섯 글자로 묶인다.

NoteBase

문 4. 고려시대 전시과에서 지급되었던 토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음전 - 5품 이상의 귀족층에게 전시과 외에 따로 지급

② 한인전 - 6품 이하 하급관리의 자식으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

③ 내장전 - 왕실의 소요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

④ 구분전 - 지위고하에 관계 없이 인품과 공로에 따라 지급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의 여러 토지 지급 형태 가운데 공음전, 한인전, 내장전, 구분전의 지급 대상과 성격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층에게 전시과와 별도로 지급된 세습 가능한 토지이다. 한인전은 6품 이하 관리의 자제 가운데 아직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한인에게 지급된 토지이다. 내장전은 왕실의 소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토지이다. 구분전은 생계가 어려운 양반·군인 가족이나 유족을 구휼하기 위한 토지이며, 인품과 공로를 기준으로 지급한 토지는 역분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관료층에게 전시과 외에 따로 지급된 토지로 이해하면 된다. 자손에게 세습이 허용된 점이 핵심이다.

② O

한인전은 6품 이하 관리의 자제 가운데 아직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한인에게 지급된 토지이다. 시험에서는 보통 하급 관리의 자제로 정리한다.

③ O

내장전은 왕실의 소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토지이다. 왕실 재정을 위한 토지라는 점이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인품과 공로에 따라 지급'이다. 이 기준은 구분전이 아니라 역분전에 해당한다. 구분전은 생계가 어려운 양반·군인 가족이나 유족을 구휼하기 위해 지급된 토지로 고쳐야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역분전'과 '구분전'의 이름 혼동이다. 둘 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역분전은 인품·공로 기준의 포상 성격이고 구분전은 생활이 어려운 가족·유족을 위한 구휼 성격이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발문이 '옳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놓치면 맞는 선지를 고를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려 토지 제도 문제는 먼저 지급 기준이 관품인지, 공로인지, 왕실 경비인지, 구휼인지부터 나누어 본다. 인품과 공로가 보이면 역분전, 5품 이상과 세습이 보이면 공음전, 관직에 오르지 못한 6품 이하 관리 자제가 보이면 한인전, 왕실 경비가 보이면 내장전, 유족 보호나 구휼이 보이면 구분전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공음전은 5품 이상 세습, 한인전은 미진출 자제, 내장전은 왕실 경비, 역분전은 공로, 구분전은 구휼이다.

NoteBase

문 5. 토지등록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속력 : 법정요건을 갖추어 행정행위가 행해진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상대방과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

② 공정력 : 행정행위가 행해지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흠이 있더라도 절대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이 이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효력

③ 확정력 : 일단 유효하게 등록된 표시사항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관청 자신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위를 다툴 수 없는 효력

④ 강제력 :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사법권의 힘을 빌려서 실현시킬 수 있는 효력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토지등록에 수반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인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의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구속력은 유효한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과 행정청이 구속되는 효력이다.
공정력은 하자가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이다.
확정력은 일정 시점이 지나면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다투기 어렵고 행정청도 함부로 번복하기 어려워지는 효력이다.
강제력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효력이다.

핵심 구분

구속력은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내용에 모두가 묶인다는 의미이고, 공정력은 하자가 있어도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된다는 의미이다. 확정력은 일정 단계가 지나 더 이상 쉽게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이고, 강제력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자력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법정요건을 갖춘 행정행위는 그 내용대로 상대방과 행정청을 구속한다는 설명이므로 구속력의 정의에 부합한다.

② O
행정행위는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된다. 이는 공정력의 설명으로 맞다.

③ O
유효하게 등록된 사항은 일정 시점이 지나면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다투기 어렵고, 소관청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쉽게 번복할 수 없다. 이는 확정력의 취지에 맞는 설명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사법권의 힘을 빌려서 실현시킬 수 있는 효력"이다. 강제력은 법원의 힘을 빌리는 효력이 아니라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효력이다. 올바르게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자력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강제력을 민사상 강제집행처럼 법원의 집행력과 뒤섞어 놓은 선지이다. 공정력과 확정력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강제력은 의무를 실제로 실현시키는 수단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문제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행정행위의 효력을 묻는 문제는 먼저 내용에 구속되는지, 하자가 있어도 일단 유효한지, 더 다툴 수 없는지, 행정청이 자력집행할 수 있는지의 네 축으로 나누면 된다. 법원의 힘을 빌린다는 표현이 보이면 강제력 설명으로는 틀릴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구속력은 내용에 묶임, 공정력은 취소 전까지 유효, 확정력은 더 다투기 어려움, 강제력은 행정청의 자력집행이다.

NoteBase

문 6. 결수연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세징수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보조장부이다.

② 부·군·면 단위로 비치하였다.

③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토지의 지목, 면적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만 기재하였다.

④ 토지소유자의 신고에 의해 작성되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결수연명부의 성격, 작성 방식, 비치 방식, 기재사항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결수연명부는 일제강점기 초 지세 부과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작성한 과세 장부이다. 핵심은 토지의 기본 표시만 적은 장부가 아니라 결수와 세액까지 포함한 징세용 장부라는 점이다. 과세지견취도는 이를 보완하는 원시적 도면이고, 토지대장은 토지조사사업 이후의 본격적인 등록 공부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결수연명부는 지세징수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장부라는 취지가 맞다. 토지세 부과를 위해 제출된 결수신고서를 묶은 과세 장부로서, 뒤에는 토지조사사업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되었다.
2번: O. 결수연명부는 면 단위로 편성되었고 부·군과 면에서 비치·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단위별로 비치되었다는 설명의 큰 방향은 맞다.
3번: X. 틀린 부분은 "정보만 기재하였다"이다. 결수연명부에는 지목, 면적, 소유자 정보만이 아니라 지번, 결수, 결가, 세액, 납세의무자 등 지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기재되었다. 올바르게는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토지의 표시와 소유·과세 정보를 기재하였다"이다.
4번: O. 결수연명부는 토지소유자의 신고를 기초로 작성된 장부이다. 실지조사보다 신고서에 의존하여 작성된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함정은 "만"이라는 표현이다. 결수연명부를 단순한 토지표시장부처럼 축소해서 기억하면 틀린다. 이 장부는 징세를 위한 것이므로 결수와 세액 같은 과세사항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런 장부 문제는 먼저 목적이 징세인지 소유권 공시인지부터 구분하고, 다음으로 작성 근거가 신고인지 실지조사인지, 마지막으로 기재사항에 결수·세액 같은 과세 정보가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면 판단이 선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결수연명부는 신고주의 과세장부이고, 과세지견취도는 이를 보완한 도면이며, 토지대장은 토지조사사업 이후의 본공부이다.

NoteBase

문 7. 많은 양의 종이형태 지적도면을 짧은 기간 내에 전산화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작업 순서와 그에 따른 자료 형식의 변화 과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종이도면 스캐닝 래스터데이터 벡터라이징 벡터데이터

② 종이도면 디지타이징 래스터데이터 벡터라이징 벡터데이터

③ 종이도면 스캐닝 벡터데이터 세선화 래스터데이터

④ 종이도면 디지타이징 벡터데이터 세선화 래스터데이터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대량의 종이 형태 지적도면을 전산화할 때 입력 방식과 자료 형식의 변환 순서를 정확히 연결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스캐닝 - 종이도면을 영상으로 읽어 래스터데이터로 만든다.
2. 벡터라이징 - 스캔된 래스터 선을 추출하여 벡터데이터로 변환한다.

왜 이 순서인가: 벡터라이징은 스캔되어 만들어진 래스터 영상이 있어야 가능한 후속 단계이기 때문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지적학 · 2016 · 6월

선지별 해설

① O
스캐닝은 종이도면을 빠르게 일괄 입력하여 래스터데이터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후 벡터라이징으로 경계선과 도형을 벡터데이터로 바꾸므로 대량 도면의 단기 전산화 순서에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디지타이징 → 래스터데이터"이다. 올바르게는 디지타이징은 도면의 점과 선을 직접 따라 입력하여 바로 벡터데이터를 만드는 방식이다. 래스터데이터는 스캐닝의 결과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스캐닝 → 벡터데이터"와 "세선화 → 래스터데이터"이다. 올바르게는 스캐닝의 직접 산출물은 래스터데이터이다. 세선화는 스캔된 래스터 영상의 선을 가늘게 하는 처리이지, 벡터데이터를 래스터데이터로 바꾸는 단계가 아니다.

④ X
틀린 부분은 "디지타이징 → 벡터데이터 → 세선화 → 래스터데이터"를 효율적 순서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디지타이징은 직접 벡터데이터를 얻는 방식이지만, 대량의 종이도면을 짧은 기간 안에 처리할 때는 스캐닝 후 벡터라이징이 더 효율적이다. 세선화도 디지타이징 뒤에 붙는 단계가 아니라 스캔 영상 쪽의 처리이다.

오답 포인트

디지타이징과 스캐닝의 산출 자료형을 뒤섞으면 쉽게 틀린다. 디지타이징은 처음부터 벡터 입력이고, 스캐닝은 먼저 래스터를 만든다. 또한 세선화를 벡터와 래스터 사이의 일반 변환 단계로 오해하면 ③, ④ 같은 선지에 끌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료 형식 변환 문제는 각 작업의 직접 산출물을 먼저 고정하면 된다. 스캐닝은 종이에서 래스터로, 디지타이징은 종이에서 벡터로, 벡터라이징은 래스터에서 벡터로 이어진다고 판단하면 순서형 선지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스캐닝은 래스터, 디지타이징은 벡터, 벡터라이징은 래스터를 벡터로 바꾸는 과정이다.

NoteBase

문 8. 다음 중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측량오류 발생 시 도해지적은 현지조정이 불가능하나 수치지적은 가능하다.

② 농촌지역에서는 수치지적 방식이 상대적으로 적합하다.

③ 굴곡점이 많은 경우에는 도해지적 방식이 상대적으로 편리하다.

④ 측량과 도면제작과정은 수치지적 방식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의 경계 표현 방식, 정밀도, 적용 지역, 작업 복잡성을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도해지적은 필지 경계를 지적도·임야도 같은 축척도면의 선으로 등록하는 방식이다. 키워드는 도면, 선, 상대적으로 간단, 저정밀이다.
수치지적은 필지의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여 경계를 수치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키워드는 좌표, 고정밀, 복잡, 고비용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도해지적은 현지조정이 불가능하나 수치지적은 가능하다"이다. 도해지적은 도면을 바탕으로 현지와의 조정을 상대적으로 할 수 있지만, 수치지적은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므로 임의 현지조정이 곤란하다.
2번 X: 틀린 부분은 "농촌지역에서는 수치지적 방식이 상대적으로 적합하다"이다. 수치지적은 정밀하지만 비용과 기술 요구가 커서 일반적으로는 시가지나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에 더 유리하고, 농촌지역 전반에 상대적으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3번 O: 수치지적은 경계점을 좌표로 계산·등록하므로 필지 형상이 단순하고 굴곡점이 적을수록 유리하다. 따라서 굴곡점이 많으면 도해지적 방식이 상대적으로 편리하다는 설명이 맞다.
4번 X: 틀린 부분은 "수치지적 방식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이다. 실제로는 수치지적이 더 정밀한 대신 측량과 도면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상대적으로 간단한 쪽은 도해지적이다.

오답 포인트

수험생은 정밀한 방식이면 모든 상황에서 더 적합하고 작업도 더 간단하다고 오해하기 쉽다. 이 문항은 "정밀성"과 "적용 편의성"을 일부러 섞어 놓았고, 특히 2번의 "농촌지역"과 4번의 "간단하다"가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경계를 선으로 등록하는지 좌표로 등록하는지부터 구분하면 된다. 그다음 수치지적은 정밀하지만 복잡하고 비용이 크며, 필지 형상이 단순하고 굴곡점이 적은 경우에 유리하다는 기준으로 선지를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도해지적은 선, 수치지적은 좌표, 굴곡이 많으면 도해, 정밀성은 수치이다.

NoteBase

문 9. 토지조사사업 당시 임야도의 등록전환으로 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해야 하는 토지가 지적도에 등록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 작성하는 도면은 무엇인가?

① 증보도

② 간주임야도

③ 부호도

④ 민유산야약도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증보도, 간주임야도, 부호도, 민유산야약도의 작성 목적을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증보도: 토지조사사업 당시 임야도의 등록전환으로 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할 토지가 지적도에 등록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을 때 따로 작성하는 보완 도면이다. 키워드는 등록전환, 지적도에 등록 불가 위치, 보완 도면이다.
간주임야도: 임야도로 조제하기 곤란한 국유임야 등에 대하여 지형도를 임야도로 간주하여 사용한 도면이다. 키워드는 지형도 활용, 임야도 대용이다.
부호도: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할 필지의 형상을 지적도상에 나타내는 도면이다. 키워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필지 형상 표시이다.
민유산야약도: 1909년 임야령에 따라 사유 임야의 경계를 신고하기 위해 작성한 약도이다. 키워드는 사유 임야 신고, 경계 약도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증보도는 임야도의 등록전환으로 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해야 할 토지가 지적도에 등록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을 때 작성하는 도면이므로 정답이다.
2번 X: 틀린 부분은 간주임야도를 등록전환 보완 도면으로 본 점이다. 간주임야도는 임야도로 조제하기 곤란한 국유임야 등에 대하여 지형도를 임야도로 간주한 도면이다. 올바르게는 '임야도 작성이 곤란한 지역에서 지형도를 대신 사용한 도면'이다.
3번 X: 틀린 부분은 부호도를 역사적 등록전환용 도면으로 본 점이다. 부호도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할 필지의 형상을 지적도상에 표시하는 도면이다. 올바르게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대응하는 필지 형상 표시 도면'이다.
4번 X: 틀린 부분은 민유산야약도를 등록전환 보완 도면으로 본 점이다. 민유산야약도는 1909년 임야령에 따라 사유 임야의 경계를 신고하기 위해 작성한 약도이다. 올바르게는 '사유 임야 신고를 위한 경계 약도'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함정은 보기들이 모두 지적 관련 도면 명칭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증보도는 등록전환 과정에서 지적도에 직접 등록할 수 없는 위치를 보완하는 도면이고, 나머지는 임야도 대용, 경계점좌표등록부 관련 도면, 사유 임야 신고 약도로 작성 목적이 서로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런 문제는 먼저 발문의 핵심 조건인 등록전환, 토지대장 신규 등록, 지적도에 등록할 수 없는 위치를 잡아야 한다. 그 다음 보기마다 작성 목적이 등록전환 보완인지, 임야도 대용인지, 좌표등록용인지, 사유 임야 신고용인지를 대조하면 정답이 가려진다.

암기 포인트

증보도는 등록전환 보완도, 간주임야도는 지형도 대용, 부호도는 좌표등록부 형상도, 민유산야약도는 사유 임야 신고 약도이다.

NoteBase

문 10. 조선시대 양안(量案)의 기재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위치는 동고답(東某沓), 서고답(西某沓), 남모(南某), 북모전(北某田) 등으로 나타냈다.

② 토지 등급은 비옥도에 따라 전분(田分) 6등, 풍흉에 따라 연분(年分) 9등으로 분류하였다.

③ 토지의 실제거리를 측쇄(測鎖)로 측량하여 양안에 기재하였다.

④ 1자호(字號) 내에는 5결이 들어있으며 자호 내의 각 필지에는 고유번호를 기재하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시대 양안의 기재 항목과 위치 표시 방식, 전분6등·연분9등의 운용, 자호·지번 체계, 그리고 근대적 실측거리 기록과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양안은 조선시대의 토지대장으로 자호, 지번, 사표, 양전방향, 토지등급, 척수, 결부수 등을 기록하였다.
사표는 토지의 동서남북에 인접한 토지나 지형지물을 적어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자호는 5결마다 천자문 한 글자를 붙인 것이고, 지번은 자호 안에서 각 필지를 구분하는 번호이다.
양안은 근대 지적측량처럼 측쇄로 실제거리를 기록한 장부가 아니라, 양전척으로 잰 척수와 결부법에 따른 결부수를 기록한 장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동모답, 서모답, 남모, 북모전과 같은 표현은 인접한 토지나 지형지물을 동서남북으로 적는 사표 방식의 설명이다. 양안은 이런 사표 기록으로 필지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② O
조선의 전세 체계에서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전분 6등을, 그해의 작황인 풍흉에 따라 연분 9등을 적용하였다. 양안과 양전 운영에서 토지 등급과 수세 기준을 이해할 때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토지의 실제거리를 측쇄로 측량하여 양안에 기재하였다'이다. 양안에는 필지의 길이를 양전척으로 잰 척수와 결부법에 따라 산정한 결부수를 적었다. 올바르게는 '토지의 길이와 결부를 양전척과 결부법에 따라 기록하였다'이다.

④ O
1자호는 5결 단위로 부여되었고, 자호 안의 각 필지는 지번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1자호 내에 5결이 들어 있고 자호 내 각 필지에 고유번호를 기재하였다는 설명은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사표에 의한 위치 기록과 척수·결부수에 의한 토지 기록을 근대적 거리실측과 혼동하면 ③에 끌리기 쉽다.
'측쇄'는 근대 지적측량의 색채가 강한 용어이고, 조선시대 양안의 핵심은 사표, 자호, 지번, 척수, 결부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선시대 양안 문제는 위치 표시가 사표인지, 필지 구분이 자호·지번인지, 면적 기록이 척수·결부수와 결부법인지로 나누어 판단한다. 선지에 근대식 체인측량이나 실제거리 중심 표현이 나오면 오답 가능성이 높다.

암기 포인트

양안은 사표로 위치를 적고, 자호·지번으로 필지를 가르며, 척수·결부수로 토지를 기록한다.

NoteBase

문 11. 다음 토지등록제도의 유형 중 토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의 공적등기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① 권원등록제도
② 날인증서등록제도
③ 적극적 등록제도
④ 소극적 등록제도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토지등록제도를 무엇을 공적으로 등록하느냐는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권원등록제도는 토지 자체의 권리관계를 등록부에 공시하는 제도이다. 키워드는 권리 자체의 등록이다.
날인증서등록제도는 토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증서나 문서를 공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다. 키워드는 문서 자체의 등록이다.
적극적 등록제도는 등록의 공신력을 강하게 인정하여 등록내용을 국가가 신뢰하게 하는 제도이다. 키워드는 공신력 보장이다.
소극적 등록제도는 등록내용을 단순 공시할 뿐 공신력을 강하게 보장하지 않는 제도이다. 키워드는 공시 중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권원등록제도는 토지의 권리 자체를 등록하는 방식이지,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의 공적등기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권원등록제도"이다. 올바르게는 문서의 공적등기를 보전하는 제도는 날인증서등록제도이다.

② O
날인증서등록제도는 토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증서나 문서를 공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므로 발문의 설명과 일치한다.

③ X
적극적 등록제도는 문서등록 여부가 아니라 등록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국가가 그 정확성을 보장하는지에 관한 구분이다.
틀린 표현은 "적극적 등록제도"이다. 올바르게는 문서의 공적등기를 보전하는 목적의 제도는 날인증서등록제도이다.

④ X
소극적 등록제도도 공신력 인정의 강약에 따른 구분이지, 문서 자체를 등록 대상으로 삼는 제도유형을 뜻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소극적 등록제도"이다. 올바르게는 문서의 공적등기를 보전하는 제도는 날인증서등록제도이다.

오답 포인트

권원등록제도와 날인증서등록제도는 등록 대상이 무엇인지로 구별하고, 적극적 등록제도와 소극적 등록제도는 공신력 보장 정도로 구별한다는 점이 자주 뒤섞인다. 이 문항은 두 구별축을 혼동하면 ①, ③, ④에 끌리도록 만든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문이 문서, 증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서류를 등록한다고 하면 날인증서등록제도를 먼저 떠올리면 된다.
반대로 권리 자체의 등록인지, 공신력 보장 정도의 문제인지를 구별하면 다른 선택지는 빠르게 걸러진다.

암기 포인트

날인증서등록제도는 문서 등록, 권원등록제도는 권리 등록, 적극·소극은 공신력의 강약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중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소유의 증명제도를 확립한다.

② 토지조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③ 토지의 면적 단위를 통일한다.

④ 조세수입체제를 확립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의 핵심 목적과 사업 수행을 위한 수단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의 소유권·경계·지목·면적을 확정하여 근대적 지적제도와 지세 부과 기반을 마련한 사업이다.
핵심 목적은 소유권 확인, 면적·경계의 표준화, 과세기반 정비이며, 조사 인력 양성은 목적이 아니라 사업 수행을 위한 수단 또는 부수적 결과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토지조사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경계를 조사해 토지소유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었다. 소유권과 경계를 장부에 등록하는 근대적 지적제도 정비와 연결되므로 옳다.
2번 X: 틀린 부분은 "토지조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이다. 토지조사사업의 본래 목적은 인력 양성이 아니라 토지의 소유권·경계·면적을 확정하고 과세 기반을 정비하는 데 있었다. 올바르게는 "토지의 소유권과 면적·경계를 조사하여 근대적 지적제도와 지세 부과 기반을 마련한다"이다.
3번 O: 토지조사사업은 토지 면적과 경계를 재조사하고 측량 기준을 통일하여 면적 단위를 표준화하는 효과를 가졌다. 전통적 단위를 근대적 측량 체계로 정비하는 방향과 맞으므로 옳다.
4번 O: 토지조사사업은 토지 현황과 소유관계를 파악해 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었다. 조세수입체계를 확립하는 식민지 재정 목적과 연결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2번은 대규모 측량사업이므로 인력 양성도 목적처럼 보이게 만든 선지이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사업의 본질적 목적과 집행 과정의 수단을 구별해야 하며, 토지조사사업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토지 파악과 과세 기반 정비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역사적 제도 목적을 묻는 문제에서는 "무엇을 달성하려 했는가"와 "그 일을 하려면 필요했던 수단인가"를 나누어 본다. 소유권 확정, 면적·경계 정리, 과세 기반 확보는 목적에 해당하고, 인력 확보나 행정 편의는 대체로 수단에 해당한다.

암기 포인트

토지조사사업은 소유권 확정·면적 표준화·과세 기반 정비이고, 전문인력 양성은 목적이 아니다.

NoteBase

문 13. 다음 중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준거타원체 및 투영법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② 집중적 토지이동에 따른 기술인력, 관리자 업무조직 미약으로 인한 경우

③ 측량원점이 통일되지 아니하여 원점 간 오차로 인한 경우

④ 토지조사사업 당시부터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이 잘못된 경우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적불부합지의 대표적 발생 원인과 좌표표현 체계의 변경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위치·면적과 실제 토지의 현황이나 점유관계가 맞지 않는 토지이다.
발생 원인 판단의 핵심은 필지의 경계성과를 직접 어긋나게 했는지 여부이다.
준거타원체와 투영법의 변경은 좌표를 표현하는 기준의 정비이지, 그 자체가 지적불부합지를 발생시키는 대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선지별 해설

① X: 준거타원체 및 투영법의 변경은 좌표표현 기준의 변경에 해당하고, 필지의 경계가 실제 현황과 어긋나게 되는 직접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틀린 표현은 "변경으로 인한 경우"이다. 올바르게는 "지적불부합지는 측량기준의 불일치, 기초측량 오류, 토지이동 과정의 관리 미흡 등으로 주로 발생한다"이다.
② O: 집중적 토지이동이 계속되는데 기술인력과 관리자 업무조직이 미약하면 분할·합병·등록 정리가 부정확해져 공부와 현황의 불일치가 생길 수 있다. 토지이동 집중과 관리 미흡은 지적불부합지의 실제 발생 요인에 해당한다.
③ O: 측량원점이 통일되지 않으면 원점 간 성과 차이로 같은 지역을 서로 다른 기준에서 측량하게 되어 경계 위치 오차가 누적될 수 있다. 이런 기준점 불일치는 지적불부합지를 일으키는 전형적 원인이다.
④ O: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기초측량이나 세부측량이 잘못되면 그 오류가 지적공부의 출발점부터 남게 된다. 초기 성과의 잘못은 이후까지 이어져 대표적인 지적불부합지 발생 원인이 된다.

오답 포인트

①의 "준거타원체 및 투영법의 변경"은 전문용어라서 원인처럼 보이지만, 이는 좌표를 표시하는 체계의 문제와 가깝다. 지적불부합지는 실제 필지 경계성과가 어긋난 원인을 찾아야 하므로 측량원점 불일치, 원시적 측량오류, 토지이동 관리 미흡 같은 직접 원인에 우선 주목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적불부합지 원인 문제는 "필지 경계성과를 직접 왜곡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측량기준 불일치, 원점 오차, 기초측량 오류, 토지이동 관리 미흡은 원인에 포함되고, 좌표표현 방식의 변경 자체는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암기 포인트

불부합지는 경계성과의 직접 오류에서 생기고, 좌표체계 변경 자체는 직접 원인이 아니다.

NoteBase

문 14.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소유권 등기제도를 도입한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작농의 관습상의 경작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② 매수자의 토지 소유를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③ 일본인의 토지 점유와 매입을 손쉽게 하기 위해

④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의 등록·공시를 위해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소유권 등기제도 도입 목적과 지적제도의 기능을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토지소유권 등기제도는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법적으로 공시하고 보호하는 제도이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 면적 등을 조사·등록하는 제도이다. 이 문항의 핵심은 등기는 권리의 공시이고, 지적은 토지 현황의 등록이라는 구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토지소유권 등기제도는 지주의 소유권을 배타적 권리로 확정하면서 소작농의 관습상 경작권 같은 부착 권리를 약화·배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따라서 소작농의 관습상 경작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
② O: 등기제도는 사문서 중심의 불안정한 소유 증명 대신 국가가 소유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치였다. 따라서 매수자의 토지 소유를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과 연결된다.
③ O: 토지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거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면 일본인이 토지를 점유·매입하기 쉬워진다. 따라서 일본인의 토지 점유와 매입을 손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진술은 타당하다.
④ X: 틀린 부분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의 등록·공시를 위해"이다. 경계와 면적의 조사·등록은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지적제도의 기능에 가깝다. 토지소유권 등기제도 도입의 직접 목적은 소유권을 법제적으로 확정하여 거래와 지배를 용이하게 하는 데 있었다.

오답 포인트

토지조사사업이 실제로 경계와 면적을 측량하였기 때문에 ④가 그럴듯하게 보인다. 그러나 문항은 토지조사사업 일반이 아니라 토지소유권 등기제도 도입 이유를 묻고 있다. 경계·면적은 지적의 영역이고, 등기의 핵심은 소유권의 법적 공시와 보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문에 등기제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먼저 권리의 공시와 법적 보호를 떠올린다. 반대로 경계, 면적, 지번, 지적도, 토지대장 같은 표현이 나오면 지적제도의 기능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등기는 권리, 지적은 경계·면적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중 시대별 지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라는 지적 관련 행정을 조부 등이 담당하고 토지도면으로는 근강국수소간전도 등을, 면적단위로는 결부제를 사용하였다.

② 고구려는 지적 관련 행정을 주부 등이 담당하고 토지도면으로는 봉역도 등을, 면적단위로는 경무법을 사용하였다.

③ 고려는 지적 관련 행정을 호부 등이 담당하고 토지기록부로는 도전장 등을, 면적단위로는 경무법과 결부제를 사용하였다.

④ 조선은 지적 관련 행정을 판적사 등이 담당하고 토지기록부로는 전답타량안 등을, 면적단위로는 결부제를 사용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신라·고구려·고려·조선의 지적행정 담당기관, 토지기록부·도면, 면적단위를 시대별로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신라는 품주·창부·조부 등에서 토지 관련 사무를 맡고 장적을 비치하며 결부제를 사용한 시대이다.
고구려는 주부 등이 지적 관련 사무를 맡고 봉역도 같은 지도 자료와 경무법이 핵심 표지이다.
고려는 호부 중심으로 양전과 토지기록 정비가 이루어지고 면적 산정에서는 경무법과 결부제가 함께 거론된다.
조선은 판적사 등에서 양전과 공부 관리를 맡고 전답타량안 같은 기록부와 결부제가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토지도면으로는 근강국수소간전도 등을"이다. 신라는 조부 등이 토지 관련 행정을 담당하고 면적단위로 결부제를 사용한 점은 맞지만, 신라의 대표 자료는 장적이며 지도 사용 기록이 있을 뿐이다.
근강국수조간정도 계열의 자료를 신라 토지도면으로 붙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신라는 조부 등이 담당하고 장적을 비치하였으며, 면적단위로 결부제를 사용하였다" 정도로 고쳐야 한다.
② O: 고구려는 주부 등이 지적 관련 사무를 맡고, 봉역도와 같은 지도 자료가 전해지며, 면적단위로 경무법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시대 표지가 서로 일치하므로 옳다.
③ O: 고려는 호부 등이 지적 관련 행정을 담당하고 토지기록부로 도전장 등이 쓰였으며, 면적 산정에서는 경무법과 결부제가 함께 거론된다. 행정기관·기록부·면적단위의 연결이 고려 시기 설명과 맞는다.
④ O: 조선은 판적사 등이 지적 관련 행정을 담당하고 전답타량안 같은 토지기록부를 사용하였으며 면적단위는 결부제가 중심이다. 조선의 양전과 공부 운영 체계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한 시대의 행정기관은 맞게 적고, 도면이나 기록부 명칭만 다른 시대 자료로 바꿔 끼우는 방식이다. ①은 조부와 결부제 때문에 신라처럼 보이지만, 토지도면 부분에 신라의 대표 표지가 아닌 자료를 넣어 오답을 만든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대별 지적제도 문제는 행정기관, 기록부·도면, 면적단위를 따로 끊어 확인한다. 한 선지 안에서 셋 가운데 하나만 다른 시대 요소이면 그 선지는 틀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신라는 장적·결부제, 고구려는 봉역도·경무법, 고려는 호부·도전장, 조선은 판적사·전답타량안으로 대조하면 풀린다.

암기 포인트

신라는 장적·결부제, 고구려는 봉역도·경무법, 고려는 호부·도전장, 조선은 판적사·전답타량안으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문 16. 다음 중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행정구역이 설치되는 경우에 행정관할구역 경계선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로, 구거, 하천은 그 중앙을 행정관할구역의 경계선으로 등록한다.

② 산악은 분수선을 행정관할구역의 경계선으로 등록한다.

③ 해안은 만조 시에 있어서 해면과 육지의 분계선을 행정관할구역의 경계선으로 등록한다.

④ 행정구역경계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간접측량방법에 따라 등록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행정관할구역 경계선의 설정 기준과 등록 측량방법의 원칙·예외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자연지형별 경계선 기준과 직접측량방법이 원칙이라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행정관할구역 경계선은 시·군·구 등 행정구역 사이의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기준선이다.
직접측량은 현지에서 경계 위치를 바로 측정하는 방법이고, 간접측량은 항공정사영상이나 수치지형도 등을 이용해 보조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이다.

핵심 구분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6조에 따르면 행정관할구역 경계선은 도로·구거·하천은 중앙, 산악은 분수선, 해안은 만조 시 해면과 육지의 분계선으로 등록한다. 등록 방법은 원칙적으로 직접측량방법이고, 하천의 중앙 등 직접측량이 곤란한 경우에만 항공정사영상 또는 1/1000 수치지형도 등을 이용한 간접측량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지적학 · 2016 · 6월

선지별 해설

① O
도로, 구거, 하천은 그 중앙을 행정관할구역의 경계선으로 등록한다는 내용이 규정과 일치한다.

② O
산악은 분수선을 행정관할구역의 경계선으로 등록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O
해안은 만조 시 해면과 육지의 분계선을 행정관할구역의 경계선으로 등록하므로 옳다.

④ X
행정구역경계를 등록할 때의 원칙은 간접측량방법이 아니라 직접측량방법이다.
틀린 표현: "간접측량방법에 따라 등록한다"
올바른 표현: "원칙적으로 직접측량방법에 따라 등록하고, 하천의 중앙 등 직접측량이 곤란한 경우에만 간접측량방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④는 측량방법의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 놓은 선지이다. 간접측량을 일반 원칙처럼 바꾸면 틀리기 쉽고, 실제 규정은 직접측량이 원칙이며 간접측량은 예외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행정구역경계 문제는 먼저 지형별 기준선을 대응시킨 뒤, 측량방법은 원칙이 직접측량인지 예외가 간접측량인지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선지에 원칙과 예외가 바뀌어 있으면 오답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경계선은 도·구·하 중, 산 분수선, 해 만조선이고, 측량은 직측 원칙·간측 예외이다.

NoteBase

문 17. 양전개정론을 주장한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약용은 정전제의 시행을 전제로 하는 방량법과 어린도법의 시행을 주장하였다.

② 이기는 수등이척법에 대한 개선으로 망척제를 주장하였다.

③ 서유구는 전 국토를 리 단위로 한 전통제의 수립을 주장하였다.

④ 유길준은 재정개혁의 방안으로 지조개정을 주장하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양전개정론을 주장한 인물별 대표 제도와 개혁 방향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정약용: 정전제를 전제로 방량법과 어린도 작성을 주장하여 양전의 정확성을 높이려 하였다.
이기: 수등이척법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 망척제를 주장하였다.
서유구: 의상경계책에서 결부 개정, 방전 방식의 양전, 수법 반포와 전문 기구 설치를 강조하였다.
유길준: 지조개정론에 따라 경무법, 전통도 작성, 지권 발행을 통해 근대적 지세제도를 세우려 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정약용은 정전제의 시행을 전제로 방량법과 어린도법의 시행을 주장하였다. 정전제와 정밀한 도면 작성을 연결한 설명이므로 옳다.
② O. 이기는 수등이척법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망척제를 주장하였다. 그물눈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출하려는 발상이 핵심이므로 선지 설명과 일치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서유구는 전 국토를 리 단위로 한 전통제의 수립을 주장하였다"이다. 리 단위의 전통도 작성과 전국적 지적 정비 구상은 유길준의 지조개정론에 해당한다. 서유구는 의상경계책에서 양전의 정밀화와 제도 개편을 주장하였다.
④ O. 유길준은 재정개혁의 방안으로 지조개정을 주장하였다. 토지를 새로 측량하고 지권을 발행하여 토지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구상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서유구와 유길준은 모두 토지제도 개혁을 말하므로 서로의 키워드를 바꿔 붙이기 쉽다. 그러나 리 단위 전통도, 지권 발행, 지조개정은 유길준의 근대적 지세 개혁 구상이고, 서유구의 핵심은 의상경계책과 양전 방식의 정밀화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 매칭형 문항은 인물명과 대표 제도명을 먼저 묶어 판단하면 된다. 정약용은 정전제·어린도, 이기는 망척제, 서유구는 의상경계책, 유길준은 지조개정·전통도로 연결하면 낯선 문장도 걸러진다.

암기 포인트

정약용=정전제·방량법·어린도, 이기=망척제, 서유구=의상경계책, 유길준=지조개정·전통도이다.

NoteBase

문 18. 토렌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호주의 토렌스 경이 창안하였다고 하여 토렌스 시스템이라고 한다.

② 토지의 권원을 조사하여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③ 미등기토지에 대해 등기용지를 최초로 개설하기 위한 변경등기를 중요시한다.

④ 권원심사는 실질적 심사주의 원칙에 따르고,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토렌스 시스템의 본질이 최초등록 중심의 권원등록제도라는 점과 변경등기와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토렌스 시스템은 최초등록 단계에서 국가가 토지의 권원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권리관계를 확정하고 권리증서를 발급하는 적극적 권원등록제도이다. 핵심은 미등기토지의 최초등록과 권원심사이지, 이미 개설된 등기용지의 사후 변동을 적는 변경등기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토렌스 시스템은 오스트레일리아의 Robert Torrens가 창안한 제도이므로 명칭 설명이 맞다.

② O
토렌스 시스템의 목적은 토지의 권원을 조사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거래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있다. 권리증서 발급과 권리공시의 신뢰 확보가 이 제도의 핵심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미등기토지에 대해 등기용지를 최초로 개설하기 위한 변경등기"이다.
미등기토지에 대해 등기용지를 처음 여는 것은 변경등기가 아니라 최초등록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에 해당한다. 토렌스 시스템은 바로 이 최초등록 단계의 철저한 권원심사를 중시한다.

④ O
토렌스 시스템은 최초등록에서 권원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제도이므로 권원심사는 형식심사보다 실질심사 성격이 강하다. 필요한 경우 등기기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등록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와도 부합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최초로 개설"이라는 표현 때문에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바로 뒤의 "변경등기"가 결정적으로 틀린 표현이다. 최초로 등기용지를 여는 절차와 이미 존재하는 등기부의 내용을 바꾸는 절차를 섞어 놓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토렌스 시스템 문제는 먼저 "최초등록을 중시하는가"와 "권원을 실질 심사하는가"를 확인하면 된다. 미등기토지, 최초 개설, 권리증서, 공신력 보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토렌스 시스템의 핵심으로 보고, 변경등기처럼 기존 등기 이후의 변동만 적는 개념이 나오면 구분해서 본다.

암기 포인트

토렌스 시스템은 최초등록과 권원심사, 변경등기는 등록 후 변동정리이다.

NoteBase

문 19. <보기>는 신라, 백제에서 사용된 결부제의 면적단위이다. 빈칸 모두에 알맞은 용어는?

<보기>
10파 → 1속, 10속 → 1부, 10부 → 1( ), 10( ) → 1결

① 정
② 충
③ 경
④ 무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신라·백제의 결부제 면적단위가 파-속-부-총-결의 순서로 올라간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파는 가장 작은 단위이고 10파가 1속이다.
속은 파를 묶은 단위이고 10속이 1부이다.
부는 속의 상위 단위이고 10부가 1총이다.
총은 부의 상위 단위이고 10총이 1결이다.
즉 이 문제의 결정 차이축은 결부제 단위의 연결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는지 여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정은 결부제 단위가 아니다. 틀린 부분은 빈칸에 정을 넣은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10부가 1총이다.
② O: 총이 맞다. 결부제는 10파→1속, 10속→1부, 10부→1총, 10총→1결의 순서이다.
③ X: 경은 결부제 단위가 아니다. 틀린 부분은 빈칸에 경을 넣은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10부가 1총이다.
④ X: 무는 중국식 경무제에서 보이는 단위이므로 신라·백제의 결부제 빈칸에 들어가지 않는다. 틀린 부분은 빈칸에 무를 넣은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10부가 1총이다.

오답 포인트

정·경·무처럼 비슷하게 보이는 한자식 토지 단위를 결부제와 섞으면 오답이 된다. 특히 ④의 무는 경무제와 결부제를 혼동했을 때 쉽게 고르게 되는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결부제 문제가 나오면 먼저 파-속-부-총-결의 오름차순을 떠올린다. 그다음 빈칸 앞뒤가 10부와 1결이라면 사이에는 반드시 총이 들어간다고 판단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결부제는 파-속-부-총-결, 즉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한 칸씩 올라간다.

NoteBase

문 20. 다음 중 도로명주소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도로의 폭이 40미터 이상이거나 왕복 6차로 이상인 경우 도로명은 주된 명사에 '대로'를 붙인다.

② 하나의 건물 등의 내부에서 서로 통하지 않는 2개 이상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각 출입구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③ 명예도로명의 사용기간은 5년 이내이며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시장 등은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 등은 도로구간을 변경할 때 기초번호를 변경할 수 있으나, 도로명을 변경할 때는 기초번호를 변경할 수 없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도로명주소 부여 기준에서 도로의 종류, 건물번호 부여 예외, 명예도로명 사용기간, 기초번호 변경 가능 범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기초번호 = 도로의 시작점부터 일정 간격으로 부여하는 번호로서 건물번호의 기준이 되는 번호이다.
명예도로명 = 기존 도로명 외에 상징성이나 공익성을 위해 추가로 부여하는 이름으로, 실제 법정주소로 사용하는 도로명과는 구별된다.

핵심 구분

대로는 도로의 폭이 40미터 이상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이다. 건물번호는 원칙적으로 건물마다 하나씩 부여하지만, 하나의 건물 내부에서 서로 통하지 않는 출입구가 여러 개이면 각 출입구마다 부여할 수 있다.
명예도로명은 사용기간이 5년 이내이며 계속 사용하려면 만료일 1개월 전에 심의 절차를 거쳐 공고한다.
기초번호는 도로구간을 변경할 때뿐 아니라 도로명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도 함께 부여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지적학 · 2016 · 6월

선지별 해설

1번 X: 대로의 차로 수 기준이 틀렸다. 대로는 도로의 폭이 40미터 이상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이다.
틀린 표현: 왕복 6차로 이상
올바른 표현: 왕복 8차로 이상
2번 O: 하나의 건물 등의 내부에서 서로 통하지 않는 2개 이상의 출입구가 있으면 각 출입구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하나의 건물이라도 출입체계가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출입구별 번호 부여가 가능하다.
3번 X: 명예도로명의 사용기간이 5년 이내라는 점은 맞지만, 계속 사용 절차의 시점이 틀렸다. 만료일 3개월 전이 아니라 만료일 1개월 전에 심의를 거쳐 공고한다.
틀린 표현: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올바른 표현: 사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심의 절차를 거쳐 공고한다
4번 X: 기초번호는 도로구간을 변경할 때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로명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도 기초번호를 함께 부여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틀린 표현: 도로명을 변경할 때는 기초번호를 변경할 수 없다
올바른 표현: 도로명을 변경할 때도 기초번호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는 숫자와 기간을 한 끗 차이로 바꾸어 놓은 함정이 핵심이다. 1번의 6차로와 3번의 3개월처럼 그럴듯한 숫자를 넣어 헷갈리게 하고, 4번은 도로구간 변경과 도로명 변경의 효과를 인위적으로 갈라 놓아 틀리게 만든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도로명주소 관련 선지는 먼저 숫자 기준과 기간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할 수 있다'인지 '하여야 한다'인지, 마지막으로 원칙과 예외를 구별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대로 기준의 8차로, 명예도로명 연장 시점, 기초번호 변경 가능 범위를 먼저 대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대로는 40미터 또는 8차로, 명예도로명은 5년 이내와 만료 1개월 전, 분리 출입구는 각 출입구별 건물번호 가능으로 정리된다.

NoteBase